

았습니다(첨부자료 6번). 또한 서울시장도 引責 辭任했습니다.

이는 바로 정부 사법당국이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 관련 공무원부터 잡아놓고 보자는 前近代의인 군사독재정권하에서나 있을 수 있는 사건 수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언론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 하면 제일 먼저 관련 공무원의 問責을 들고 나오고, 사고의 정확한 원인 조사보다는 관계공무원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는 풍토에 당국자나 사법당국에서도 덩달아서 加勢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사고를 수습하고 원인을 정확히 조사하여 규명하고 앞으로 그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Know-how를 傳授해야 할 관계 공무원을 무조건 구속하여 여론부터 무마하는 사고 수습 방법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을 구속한 후에 사고의 원인 조사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검찰 주관으로 시행한(1994.11.~95.3) 성수대교 붕괴사고 원인규명감정단의 조사 결과나 서울시에서 대한토목학회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면, (첨부자료 7)번과 같이 성수대교는 애초 설계 잘못과 건설 당시 시공회사에서 엔터티 용접을 한 것이 직접 원인이었고, 성수대교 건설 당시에는 해당 橋梁示方書에는 없었으나 1992년도 개정 도로교표준시방서 제1편 제6장에 維持 관리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점검 및 체계적인 維持 관리의 未備와 서울시 維持 관리 담당공무원들의 강교량에 대한 전문 지식의 결여로 인한 감리 감독의 부실 등 위 삼박자에 의하여 예고된 사고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위와 같이 事故原因 조사가 先行되고 판결 결과에 따라서 관련 책임자를 문책, 처벌하였더라면 적어도 열악한 조건 속에서 維持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상당수 공무원들의 不利益을 最小化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의 능력이나 기술 수준은 생각지 못하고 실적과 결과만을 중요시하던 物量 위주의 건설시대에 나타난 부작용이 이 시대에 표출되는 不可抗力의인 결과를 오늘날 성실하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뒤집어쓰고 있다는 사

실을 直視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관련 부서의 자리를 맡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억울하게 처벌되어야 하는 공무원이 도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든지 즉시 전문 기술진을 투입하여 먼저 사고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에 따라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사건 사고의 수습방법에 대한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市政開發研究院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다음은 市政開發研究院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에 대하여 건의합니다.

서울 市政開發研究院은 11세기 서울의 長短期 종합개발계획과 정책을 연구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 開院한 지 3年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研究院의 시설과 서울시의 예산 지원내용을 보면, 과연 이러한 연구기관에서 세계적인 도시 서울의 21세기를 위한 종합 개발계획과 정책을 연구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本議員이 研究院을 방문했을 때 研究院의 환경과 분위기는 어느 건설회사 현장사무소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경찰청과 함께 사용하는 건물의 어수선한 분위기와 研究用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는 요즘엔 대부분 사용하지 않는. 그 기능이 형편없는 저급기종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인력구조 현황 역시 非正常的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데 正規職員이 73명인데 비하여 臨時職 및 非正規職 직원이 156명이라는 기형적인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他國策研究院의 평균 定規人力이 170명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市政開發研究院의 연구 인력도 그 수준까지 확보하지 않으면 研究院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타국책연구원의 인력구조 현황

구 분	정 규(명)	비정규(명)
한국개발연구원	202	10
국토개발연구원	199	40
교통개발연구원	109	65
국책연구원평균	170	35
시정개발연구원	73	156

정규직원보다도 두 배나 많은 임시직이나